

재산제세 세무조사 ·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

조사 개시와 자료 제출

국세청 2024년 재산제세조사 가이드북 B유형(사전통지 생략)을 참고하고 국세기본법의 현행 절차를 대조했습니다. 이 체크리스트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자문이나 공식 제출서식이 아닙니다.

확인할 문서

- ☐ 조사공무원 신분과 소속·연락처
- ☐ 조사 대상 세목·기간·사유·범위와 조사 기간
- ☐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기재된 통지
- ☐ 납세자권리헌장과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
- ☐ 실제 조사 시작일·장소, 통지 수령일과 수령인

제출과 진술의 기록

- ☐ 담당자와 연락 창구 지정, 요청자료·요구기한 목록 관리
- ☐ 제출한 자료의 사본·목록·제출일과 수신인 기록
- ☐ 사실을 확인하고 진술, 기억이 불명확하면 자료 확인 후 보완
- ☐ 확인서·문답서의 내용과 표현을 읽고 사실과 일치할 때 서명
- ☐ 전자자료·장부 원형 보존, 삭제나 사후 내용 조작 금지

절차상 권리와 협조

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20일 전이며 법정 재조사의 경우 7일 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법정 사유로 생략된 조사도 개시 통지와 권리 안내를 확인합니다. 장부 일시 보관 시 동의·목록·보관증과 반환청구 절차를 확인하고, 범위 확대·기간 연장·중지·재개의 통지를 보관합니다.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형사절차에 맞는 조력을 검토합니다.

근거: 국세기본법 제81조의5·제81조의7~제81조의10. 정당한 조사 협조 의무와 권리보호 요청은 함께 관리.

재산세세 세무조사 ·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

세목별 증빙과 결과 이후의 기한

각 문서의 수령일과 마감일은 담당자가 실제 송달 경위와 법령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. 서로 다른 기한을 한 날짜로 관리하지 않습니다.

먼저 모을 자료

양도: 계약·대금 흐름·취득가액·경비·주택 수·거주 이력.

상속: 사망일 기준 재산·채무·가족관계·사전증여·평가자료.

증여: 자금출처·차용 및 이자·상환 기록·증여 시점과 평가.

주식변동: 주주명부·지분변동표·계약·취득자금·결의·재무자료.

공통: 쟁점별 사실, 증거번호, 신고내용, 차이의 원인과 보완자료를 하나의 목록으로 연결.

종료 이후 확인

- ☐ 조사 결과 통지의 과세 근거·산식·증빙 반영 여부
- ☐ 과세전적부심사 대상과 법정 제외 사유, 통지 수령일부터 원칙적 30일 기한
- ☐ 고지 후 이의신청·심사·심판의 경로와 원칙적 90일 기한 및 실제 기산일
- ☐ 조기결정 신청의 영향, 납부·징수유예 가능성
- ☐ 심사·심판 중복 금지, 소송 전심절차와 제소기간

기한 기록란

조사 결과 통지 수령일: _____

고지서 수령일 / 납부기한: _____

선택한 불복 경로 / 청구기한: _____

담당자 / 검토일 / 다음 조치: _____

근거: 국세기본법 제55-56-61-68-81조의12-81조의15 등. 국세청 guide_04 안내와 2024년 B유형 가이드·서식은 자료실에서 제공. 제출 전 현행 서식 확인.